

# 대선 7개월 앞둔 여야, 때 아닌 '탄핵 공방'

### 민주당, 盧 탄핵 찬반 두고 이재명 vs 이낙연

###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탄핵의 강'에 발 담귀

대선을 앞둔 여의도 정치권이 때 아닌 '탄핵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대선 후보 본 경선에 접어들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참여를 두고 논란이 불붙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공방이 재연됐다.

민주당은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서 탄핵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 공방은 이 전 대표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이 지사 측이 당시 탄핵 표결에 참여한 이 전 대표가 찬반 중 어느 쪽에 표를 던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적통 공격을 받아온 이 지사 측에서 이 전 대표의 '아킬레스 건인 탄핵 문제를 건드린 셈이다. 이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대변인이었지만 분당 사태 때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에 남았다.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현 국민

의힘)과 함께 탄핵을 주도했다.

이재명 캠프에선 탄핵 당시 본회의 장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직접 "(이 전 대표가) 탄핵 표결에 반대했다고 하니 납득이 안 된다. 진실이야 본인만 알겠지만 투명하지 않고 안개가 낀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방송에 나와 "탄핵 반대를 한 게 맞다"고 밝혔지만 공방이 거세지자 이낙연 캠프 측에선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 사실을 왜곡해 이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치졸하고 비열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여권발 탄핵 불뿔은 국민의힘에도

옮겨 불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탄핵의 강'을 어렵게 건넜던 국민의힘이 다시금 탄핵 블랙홀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급을 안타까워 하는 분들의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 '친박' 핵심으로 꼽혔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윤 전 총장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호응했다.

홍준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주도권을 아직 갖고 있을때 대서면을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인지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을 의미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유·불리나 계산을 떠나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통령이 합법적 사면권으로 결사해지하는 게 맞다"고 말을 보탰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퇴임 후를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인륜과 상식의 문제"라고 압박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조경태, 홍준표 대선캠프 선대위 맡는다

### "정권교체 밀알 될 것" "깨끗·개혁적 친군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 선대위원장이 됐다.

28일 뉴시스 취재결과,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 의원과 오찬을 하며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선대위원장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의원 캠프의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과거 당이 달랐을 때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존경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홍 대표의 공약과 국가관이 나의 생각과 같아 수락했다"며 "선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를 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5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에서 친문을 비판하다, 2016년 새누리당으로 옮긴 후 지난 2019년 2월 당 최고위원을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경태 의원님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다가올 당내 경선과 본선에 조 의원님이 우리 캠프 선대위원장이 돼 함께 정권 교체에 나서기로 의기투합했다"며 "깨끗하고 개혁적인 조 의원님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신다고 하니 저는 친군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TV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후보.

## 與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野 "언론재갈법·언론통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방

여야가 28일 정법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이른바 '언론 개혁법안'의 분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뚫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과 '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당장 멈추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조항으로 인한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정법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기한 절반으로 단축한다

### 소병철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납품업자 자금 유통에 도움되길"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유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을 하며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

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자금 유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로 상황을 청취하였다.

이에 소 의원은 즉각 법안 개정에 착수하여 공정위와 장기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

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